

마산의 민주화운동 비교 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부마항쟁

정주신 경상대학교

논문 요약

이 글의 목적은 3·15의거가 4·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18항쟁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와 10·18항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해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건인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움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마산, 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10·18항쟁, 10·26사건

I. 서론

한국현대사에서 ‘마산(馬山)’은 ‘민주화의 성지’로 규정 되어 있다. 이는 경남 마산에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면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는다는 애기의 반증을 의미한다. 1960년 3·15의거가 3·15 당일 정·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자유당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한 마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시위였듯이, 1979년 10·18마산항쟁(이하 10·18항쟁) 또한 이전 10·16부산항쟁에 영향받아 일어난 시위가 질적 규정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항거로서 정권붕괴에 이르는 징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3·15의거나 10·18항쟁은 독재타도가 목표였으나, 둘 다 직접적으로 독재자를 타도하지는 못하고 미완의 의거 혹은 미완의 항쟁이라는 불명예 꼬리표에 만족해야했다.

마산의 3·15의거가 3·15 정·부통령 불법선거로 유권자들을 강제하며 집권욕을 꾀해온 이승만 정권의 타도에 초점을 두었듯이, 거의 20년 만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은 또다시 마산에서 민중들의 독재타도라는 정의감이 질적 규정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하여 유신체제로 영구집권을 꾀한 박정희 정권의 타도에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 10·18항쟁은 교내시위 실패에도 불구하고 10·16항쟁 발발과 더불어 도심시위로 확산되면서 유신철폐와 박정희 정권타도에 불길을 당겼다는 데서 중차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란 두 사건을 비교분석하는 까닭은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시의적절한 주제이자 당면한 진상규명과 부마항쟁에 대한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는 국민적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이 3·15의거 및 4·19혁명과 관련하여 등치되는 대목은 신군부에 의해 일사천리 진행된 10·26사건에 대한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김재규 증양정보부장이 “김재규 군법회의 최후진술,”에서 밝힌 박정희 대통령의 폭압성 발언 내용이 그것이다. 즉 1979년 10월 16일~20

일까지 4일간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을 두고 강경진압을 예고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부마항쟁이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해 버리면서, “서울에서 4·19와 같은 데모가 일어난다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집권욕을 내비쳤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당 때는 최인규(내무부 장관), 곽영주(경호대장) 같은 친구들이 발포를 명령해 사형을 받았지만, 대통령인 내(박정희)가 발포명령 내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대통령인 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정주신 2011, 297; 조갑제 1987b, 56) 라고 강한 집권욕을 보였고, 이에 호응한 차지철 경호실장은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 캄보디아에서처럼 1~2백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에 불을 당겼다. 이를 듣고 있던 김재규(중앙정보부장)는 대통령(박정희)과 경호실장(차지철)의 집권 강경론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을 차단할 유일한 수단으로 이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논제의 필요성에 의해 3·15의거와 10·18항쟁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은 마산지역에서 이승만 정권타도와 박정희 정권타도 등 두 차례나 혁혁한 기폭제 공과를 세웠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이루어질 때, 3·15의거 당시 실종된 김주열 학생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르면서 4·11의거로 재발발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 원흉들의 잔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혁명과 같은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1979년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려는 10·16 부산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발화된 시위가 10·18 마산 경남대학교로 확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10·26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10·18행쟁이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며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마산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 타도의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는 현대사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8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2019 가을)

둘째, 마산이 창원시에 편입된 후 창원시가 3·15의거나 10·18항쟁의 역사성을 중요시하며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올해가 3·15의거 발발 59주년과 10·18항쟁 발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적 가치를 방치한 채 별다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3·15의거나 10·18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서 시차를 뒀지만 연속적으로 독재자 타도의 큰 위력을 지녔고, 그 연계선상에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이런 민주적 사실성과 중대성에 비취 볼 때 두 사건에 대한 연구성과의 미흡과 상호관계의 결핍을 보여준 것에 대한 반증으로써 마산의 민주화 성지를 정착시키는 위해서도 연구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셋째, 마산에서는 민주화의 정통성을 둘러싼 지역 내의 이기주의가 있어 상호 불일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3·15의거와 10·18항쟁 단체 간의 민주화 연계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마산의 민주화 성지 위상 강화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자체 민주화운동의 고유성만을 부각시킬 뿐,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의 합일성과 연계성을 이뤄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10·18항쟁은 3·15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나 정작 일부 항쟁 농단 세력이 3·15와 10·18의 불의에 항거해 놓은 정의를 짓밟고 자신들이 항쟁의 주모자인 것처럼 조작과 왜곡을 일삼은 것은 마산 부마항쟁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어서 10·18항쟁과 3·15의거와의 간격이 더 벌어지게 하는 요체가 되었다.

넷째, 올해로 부마항쟁 40주년과 문재인 정부하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10·18항쟁은 이미 지정된 지 오래된 3·15의거와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연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근 20년의 시차는 있으나 3·15의거와 10·18항쟁이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붕

피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마산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정치의 커다란 켜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15의거가 일찍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데 비해 10·18항쟁이 뒤늦게 지정된 것은 항쟁과 더불어 사망자가 없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나 행정부에서의 부마항쟁의 제도화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었다. 게다가 2014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그 임무는 진정한 진상규명도 아니고 단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항쟁관련자들의 보상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되 진상규명을 역행한 항쟁농단자들의 처단과 함께 부마항쟁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3·15의거와 달리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10·18항쟁은 1989년 10월에 펴낸 부마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마산편 증언내용과 전개과정이 항쟁농단으로 항쟁의 팩트와 진실이 변질돼 항쟁사 전반을 조작과 왜곡을 일삼아 놓은 바 진실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그동안 3·15의거가 불법으로 조작과 왜곡이 거의 없었던 점과 달리 10·18항쟁은 항쟁농단 세력들이 항쟁사를 거짓을 꾸며 정의를 짓밟아놓아 창원시민은 물론 국민들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항쟁을 도둑질하고 오류투성이로 만들어낸 농단세력이 속죄 없이 계속해서 각종 증언집에 양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차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창원시가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장악해 농단을 일삼은 세력에게 매년 수천만 원 씩의 보조금으로 대주는 것은 그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범법적인 항쟁사 농단으로 기록물을 양산한 기념사업회의 속죄 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짓밟아놓은 항쟁 조작과 왜곡이 진실인 양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뒤흔들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항쟁농단은 항쟁관련자들은 물론이고 창원시민과 더 나아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3·15의거와 10·18항쟁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향도 마산에서 발생한 두 사례의 민주화운동이 왜, 어떻게 발화되어 공고한 체제였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라는 두 대통령을 무너트릴 수 있었던 원천적 기재로 작용한 것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3·15의거와 10·18항쟁의 발화점이 창동네거리로 장소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지녔지만, 마산지역 민주화의 거점지가 3·15와 10·18의 연계성으로 볼 때 필연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창동은 마산의 중심지로 상점이나 극장, 그 주변에 전통어시장 등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만남과 교류의 요새지였다. 셋째, 3·15의거가 이승만 정권을 직접 타도하지 못한 미완의 의거였지만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첫 단추 역할을 해냈다면, 10·18항쟁은 10·16항쟁에 의해 촉발된 시위로 전개되었지만 당시 시위과정에서 과격성은 부산항쟁보다 더한 미완의 민중항쟁이었다. 그러니까 3·15의거나 10·18항쟁은 4·19혁명이나 10·26사건에 비해 미완의 의거였고 미완의 항쟁이었듯이 당시 독재자를 타도하지 못한 의거이고 항쟁이었다. 물론 완전한 의거이고 항쟁이었다면 분명 독재자는 타도되고 새로운 헌법에 의거 새정부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 여하튼 앞서 제시했지만 3·15의거가 전국 최초로 부정선거로 불의의 항거해 발발하였듯이, 10·18항쟁은 10·16항쟁의 발발이 마산으로 급속히 확산돼 시위의 연계성에 따라 발생한 항쟁으로 또다시 불의에 강한 고장임을 세상에 알렸다. 넷째, 앞서 불의에 저항해 일어난 3·15의거와 마찬가지로인 10·18항쟁이 안타깝게도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의 항쟁농단으로 위상과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일이 발생했다. 3·15정신과 부마항쟁정신을 기념사업회가 주도해서 마산 부마항쟁을 농단했다는 것은 3·15정신과 부마항쟁정신과 배치된다. 이러한 항쟁농단은 관련자들을 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산·창원 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범법행위 그 자체였다. 일단의 6~7명이 마산 산복도로를 타고 도심으로 가던 중 무학초교에 이를 때 호젓한 주택가에서 시위조차 못한 상태에서 경찰 2인1조에 평범하게 잡힌 최갑순·육정애와 다른 방향의 정성기 등이 ‘부마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을 펴낸(편집자 정성기) 그 자체가 그들 5인방(?)만의 경찰의 피의자 공소장을 게재해 시위 주

도세력인 양(부마만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89, 73-78) 10·18항쟁 전개과정을 도둑질해 놓았다. 이들은 살아있는 목격자가 존재함에도 자신들에 의해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짓증언의 오류투성으로 자료집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 체포과정에서의 온갖 인신모독을 당해 그들의 조작과 왜곡이 정당하다는 증거로 들이대며 항쟁농단을 계속해 왔다.

결국 4·19혁명을 가져다준 마산의 3·15의거와 그 후속타인 4·11의 거가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욕을 채우려던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되었듯이, 10·26사건을 가져온 10·18항쟁이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꾀한 유신체제가 타도되는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동질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째, 이 글은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을 비교분석하는 데서 그 주된 목적을 지닌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이 사건이 독재자가 타도되는 계기로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3·15의거와 10·18항쟁으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10·16부산항쟁과 달리 10·18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인 그 당시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오류투성이의 전개과정이 되었음을 논거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3·15의거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3·15의거와 10·18항쟁의 발발이 권위주의 정권과의 빈번한 민주화 투쟁에서 인과관계를 지니지만, 두 사건 모두 미완의 정권 타도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들도 결국은 권위주의 정권 타도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여기서 이론적 배경을 위한 3·15의거 관련 기존 학술논문의 주요 연구는 대부분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결전과정을 연구방법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막강한 통제와 선거조작을 피해 장기집권을 해올 수 있었고, 이에 실망한 비판적인 민주세력들은 정권타도에 매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첫째, 3·15의거의 재현에서 시민소외의 연원을 해방이후 마산시민 구성에서 귀환 동포와 피난민의 유입, 높은 교육열과 반자유당 정서와 저항의식의 성장으로서의 지배층의 존재 형태, 마산시민의 정치의식, 3·15의거 직전 마산시민의 대응과 항쟁의 주체 등 마산시민들의 형성과정과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상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 것이다(차철욱 2010, 371). 둘째, 3·15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대구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이라는 시위의 연계성에서 파악하지 않고, 일반사회 영역 교과서에는 4·19혁명만을 부각시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다(유명철 2018, 37-38). 셋째,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징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을 3·15의 기념비, 상징탑 등의 상징물과 장소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공간을 통하여 마산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본 것이었다(손은하 외 2010, 422). 넷째, 마산지역 학생의 3·15의거 참여와 그 정신사적인 배경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억과 경험에서 찾는 작업으로, 일제강점기 근대학교의 설립, 근대교육의 시행과 학생층의 형성을 검토하면서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계층의 항일운동과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송성안 2018, 733). 다섯째, 1960년 3·15의거 당일 야간시위에 참가했던 한 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3·15의거라는 거한 사회적 사건을 특정 개인의 활동이라는 창(window)을 통해 재조명해 봄과 동시에 역으로 사회가 개인사의 삶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왜곡시켰는지를 개인의 생생한 삶의 탐구를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미시사 방법론과 구술사 방법론으로 삼아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었다(서익진 2018, 92-93).

이에 비해서 10·18항쟁 관련 기존 학술논문의 주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10·18에 국한되지 않고 부마항쟁 전체이거나 10·16항쟁 관련 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배경에 연계된 것들이다. 10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라는 논제로 10·16항쟁과 10·18항쟁

의 비교분석을 한 것이 유일한 것이었다(정주신 2018). 중요한 것은 10·18항쟁을 조직적으로 개입해 역사적 전개과정의 조작과 왜곡을 일삼은 최갑순·옥정애 등 농단세력은 10·18항쟁 정신을 망각하고 범법적으로 자신들의 편익과 오만함에서 항쟁농단을 일삼은 행태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항쟁사의 역사를 훼손시키는 일이었다(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1989, 160-182; 188-193). 특히 항쟁 농단세력은 기록물 발간에 앞서 항쟁관련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기념자료집과 증언집을 펴내기보다는 3·15정신이나 부마항쟁정신을 망각하고 불순하게 일당의 5인방(?) 세력에 의해 항쟁이 주도된 것인 양 온갖 전개과정 서술이나 이들에 협조적인 사람을 동원해서 증언을 왜곡시켜 놓았다. 게다가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목격자가 나타나고 항쟁 농단세력들에게 현장조사나 대면조사를 요청해도 오히려 항쟁 농단세력이 동 위원회에 조사 요청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자세를 보였다. 공신력 있는 집행기관이 농단세력의 강압적 입김에 흔들려 아무런 조사조차 못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에 무력함을 보였다. 오로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의 신고 및 접수만 받고 엉터리 보고서를 펴내는데 소일할 뿐이며, 동 위원회는 진상규명은 배제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경찰 및 군검찰의 엉터리 피의자조서를 베껴내기에 급급하는 형국이어서 대부분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민주화 연구가 독재자의 행태나 집권욕과 무관하게 그저 이론적인 방법론에 함몰된 채, 한국의 현실과 달리 민주화 운동 연구에 접근해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구조나 경제발전이 민주화에 유리하다는 구조적 접근이 그렇고 시민계급의 도전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인이라거나 개별국가의 민주화가 모티브가 되어 다른 국가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촉진한다는 과정적 접근이 그렇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체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연구방식도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또한 쿠데타를 통한 군의 집

권이나 독재자 출현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제3세계적 현상과도 다르다. 한국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이 독재자일수록 집권욕이 강한 리더십 행태이기 때문에 독재자의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한국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반대세력을 일망타진하려는 측면이 강했던 것도 기존 민주화 연구가 제대로 한국정치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경향이었다. 게다가 독재자의 경우 시민사회 혹은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응해서 경찰과 군 개입에 의한 탄압이나 악법의 제정으로 오로지 집권욕을 강하게 표출해왔듯이 권력승계나 민주화의 진척을 부정해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재자가 장기집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찰력의 강화와 군의 정치개입이나 긴급조치의 양산이라는 독재자의 뒷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종 반대세력의 시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보기관과 경찰의 개입이 심화되었고 이들에 강력한 대처라는 강수로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요컨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독재자의 안전판인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켜 어떠한 세력에도 빈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3·15의거와 10·18항쟁에 대한 비교분석에 ‘권력의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 of power)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세력이 체제의 모순이나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이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민주화운동을 조기에 차단시킬 목적으로 악법의 양산이나 무자비한 탄압, 궁극적으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따른 군대 동원이 대통령의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강제력을 주나 오히려 민중의 성난 시위로 대통령이 권좌에서 하야하거나 대통령 측근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3·15의거와 10·18항쟁을 분석하고자 하는 논제도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재촉한 것이었지만,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애초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누려 공고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메카니즘에 의존해온 것도 상대적으로 민주화세력이 독재자가 펼쳐놓은 올가미의 뒷에 걸려들거나 아니면 독재자가 스스로 올가미의 뒷에 가두어지는 양태 중에 권력의

부메랑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오히려 권력유지라는 덫을 치고 체제유지를 꾀해 왔으나 그 행위자인 대통령에게 불행한 우연적 상황이 발발해 그 자신이 덫에 갇히는 것에 불과했다. 그 이면에는 학생과 재야세력, 대중들간의 반체제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었으나 탄압국면에서 경찰기관이나 정보기관의 편익에 따라 부메랑의 범위가 커지기도 하지만 좁혀질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 것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약법을 양산하는 경우, 오히려 그 탄압의 기재들이 부메랑이 되어 독재자에게 되돌아와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음이 분명했다. 즉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체제유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일삼거나 반체제운동을 탄압할 경우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강한 설득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권력의 부메랑 효과에 해당되는 사례는 대통령의 집권욕에서 나타나는 폭압성 그 자체였다. 마산에서 1960년 쏘아올린 선도적 부정선거 타도가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의 집권욕에 대항해 3·15와 4·11 두 차례에 걸친 마산의거의 단초로 촉발되어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타도되었다. 1979년 10·18항쟁 또한 시위가 발생하면 대통령인 박정희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는 구두선(口頭禪)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타도와 유신철폐를 부르짖는 부마항쟁 민중들의 저항으로 10·26사건이 촉발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폭압적 통치를 강행하면서 유신체제를 지탱해 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하야보다 더 참혹하게 살해되는 불운을 맞았다. 부마항쟁 발발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그 자신이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살인적인 악법과 시위대 탄압시 군부동원으로 자신의 강한 권력의지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의해 살해되는 운명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3·15의거 이후 근 20년 만에 10·18항쟁의 발발로 권위주의 정권을 또다시 타도할 수 있었

던 것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지켜온 불의에 강한 시민성을 굳건히 담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컨대 3·15의거와 10·18항쟁이 무릇 독재정권과 그 자체의 체제 모순이라는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지만, 이미 민주화운동은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이 스스로 쳐놓은 집권욕이라는 덫에 빠져 권력의 부메랑처럼 권력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소산으로 기폭제 역할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3·15의거는 포스트 이승만인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 위해 덫을 쳐놓은 경우이며, 10·18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을 둘러싼 정보부장(김재규)과 경호실장(차지철)이 충돌해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한 경우이다. 결국 3·15의거가 12년 세도 자유당 집권세력의 탄압과 부정선거의 불의에 대응해 왔듯이, 10·18항쟁은 18년 세도 공화당 집권세력의 헌법의 변칙통과와 유신 장기집권의 모순과 불의에 정면 도전했던 것이다. 3·15의거의 관변을 활용한 부정선거와 유신탄압에 맞서 독재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10·18항쟁의 배경은 권력의 부메랑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재자가 집권욕을 부추길 때 오히려 독재자는 자신의 덫에 자가당착 돼 권력에서 하야해 쫓겨나거나 부하의 권총에 살해되는 운명으로 내몰렸기에 이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타당성을 지닌다. 3·15의거와 10·18항쟁 두 차례의 사례가 입증하였듯이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독재자가 죽음이나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데서 그 비교분석이 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3·15의거와 10·18항쟁을 비교분석을 한다는 그 자체는 마산시민이 독재자의 불의에 분개해 분연히 일어섰다는 데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독재자를 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음을 밝히면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시위의 발발과 전개과정

1. 시위의 발발 요인

첫째, 정당의 불순한 조직 확대와 부정선거를 대비하는 개각 단행을 통해 체제유지 강화시키는 것은 시위 발발의 직접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취한 자유당이 모든 조치와 조직 확대는 민심과 동떨어진 체제유지용이었고, 정부통령선거 당시 3·15의거로 초래된 부정선거 획책으로 그 부메랑이 대통령을 직책에서 끌어내리는데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표 1>과 같이 자유당은 대통령선거 1년 3개월여 남은 1959년 1월 6일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이승만의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창당 이래 유례없는 대대적 조직망 확대작업, 즉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 구성, 1월 22일 자유당의 관변단체이자 선거 전위대인 대한반공청년단(총재 이승만, 부총재 이기붕, 단장 신도환) 발족, 3월 21일 선거에 대비한 개각 단행, 정부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黨) 세포를 조직하고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 5월 13일에 실시된 7개도 지방장관 경질에서도 자유당이 자당인사 대거 진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조직의 장악을 위해 시·읍·면장의 임명제 도입을 꾀하는 동시에 비자유당계 인사의 포섭 등이었는데, 이는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한 행동대였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시기 대통령직선제로 관변/흑색선거와 피상적인 계획경제를 펼쳐왔고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집권 공화당 의원들만의 변칙통과로 대통령 3선을 가능케 함으로써 집권욕을 강화해왔다. 더욱이 5·16쿠데타 세력으로서 통치의 정당성이 없어 대통령직선제로는 영구집권이 불가피해지자 쿠데타적 발상을 가지고 비상계엄하에 영구집권용 대통령 간선제의 유신체제를 획책했다. 유신체제는 정당이나 의회의 무능화뿐만 아니라 야당의 존립을 뒤흔든 대통령 1인체제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을 선출케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18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2019 가을)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는 유정회를 갖춰 입법·행정·사법의 3권장악, 그리고 대통령 긴급조치권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한 체제였다(정주신 2017a, 38-45). 이런 체제는 대통령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지자 군부를 토대로 막강한 정보 및 정권 안보기능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권부간의 충성경쟁을 유도해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났다. 그 단적인 것이 YH사건과 야당(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의 의원직 박탈, 부마항쟁 발생시 온건파 김재규 정보부장의 민란이라는 보고에 대통령이 4·19때를 회고하며 직접 발표명령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뜻을 보인 후, 그 자신 정보부장의 총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강화와 집권욕은 민중들이 독재자 타도에 나서는 기폭제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정보부장에게 살해되어 대통령직을 잃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다.

<표 1>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직전/직후 여야 정당의 상황

집권여당 (이승만 대통령+자유당)		야당 (민주당)	
1959년 1월 6일	-이승만 대통령, 4선 출마	1959년 10월	-신·구파 간에 치열한 각축전, 정·부통령후보 지명대회마져 연기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 발족, 4선 출마의사 지지	11월 26일	-전당대회 개최, 구파 조병옥 대통령후보, 신파 장면 부통령후보 겸 당 대표최고위원 각각 선임
3월 21일	-선거대비 개각 단행	1960년 1월29일	-대통령후보 조병옥은 신병 약화로 미국행
5월 13일	-7개도 지방장관 경질	2월 15일	-조병옥 대통령 후보 미국에서 급서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후보 이승만, 부통령후보 이기붕 지명		-4할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지령을 폭로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대책 세우고 부정선거 사전 준비	3월 9일, 3월 11일	-전남 여수시당 재정부장, 당사 앞에서 78명의 괴한들에게 피습·결명 -전남 광산군 부락의 반공청년단이 자유당 선거유세 후 민주당원을 테러로 사망시킴
11월부터 1960년 2월까지	-내무부장관 최인규, 전국경찰 대대적 인사이동 단행, 일선 경찰서장의 연고지 중심 재배치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3월 14일	-미국 뉴욕타임즈, 민주당 선거관련인 피살사건 보도 -민주당, 전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

	공무원친목회 조직으로 득표를 활동 지시		
11월부터 1960년 3월 15일 까지	-내무부,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 극비리 지시(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과 자유당 후보 득표율을 85%까지 올리기 등)	3월 15일	-마산 1차 데모: 민주당원이 주축,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플래카드 들고 시민들에게 부정선거 폭로와 호응을 얻으며 남성동 파출소와 부림시장 거쳐 당사 앞에서 시위 -민주당 중앙당은 최고위원 및 간부회의 열고, 오후 4시 30분 공식적으로 선거 무효 선언 발표
3·15선거 결과	-중앙선관위,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러 국민적 비판 일자 득표율을 80% 지지로 하향조정,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 -내무부, 여당의 이승만 대통령 후보 득표율을 94%에서 90%로, 이기붕 부통령 후보 득표율 92%에서 84%로 자체 하향 조정(내무부장관 최인규의 공소장)	3·15선거 결과	-민주당, 선거무효 선언 -민주당 장면 184만여 표 집계 -어느 지역구에서는 인구보다 더 많은 투표수가 쏟아지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고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은 1표, -여당 후보 이기붕은 수만 표라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
		3월 15일 저녁, 도심 마산	-투표와 개표상의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은 3월 15일 저녁 마산에서의 부정선거규탄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4·19혁명으로 이어져, 결국은 3.15선거 무효 -오동동 마산시당부에 1,500여 명의 민주당 시위대가 모였는데, 이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주당원들을 연행하고 시위대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

출처: 필자 작성.

둘째,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선거는 제로섬게임으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는 만큼 대통령의 집권욕을 드러내는 선거과정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여 시위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당은 1959년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재빨리 개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여 선거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야권의 선거전

전열 준비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지자 자유당은 조기선거 (1960. 3. 15) 실시를 위해서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부정선거를 획책해 나갔다<표 1> 참조. 반면 야당 민주당은 11월 26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신·구파 간의 실력대결 결과 후보(구파의 조병옥을 대통령 후보, 신파의 장면을 부통령 후보)-당 대표최고위원(장면)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지병으로 급서하자 정부통령선거가 쟁점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결원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 부통령 선거(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간의 대결)가 3·15선거의 쟁점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고수는 이기붕의 존재에 있다고 보고 이기붕과의 동반당선을 역설했으나, 오히려 부정선거와 득표율과의 함수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친 득표율이 3·15의거를 부채질하게 되었다. 한편 제3공화국시기 국민의 대통령직선에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박빙의 야당후보는 윤보선과 김대중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보다는 박정희 대통령만을 뽑아줄 행동대, 즉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법선거나 오랜 집권욕을 척결할 수 있는 토양만 만들어주면 그에 대응한 체제변환을 요구할 수 있던 터에 3·15의거와 4·19혁명을 반면 교사로 삼아온 부마항쟁이 10·26사건으로의 귀결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 특히 부산-마산시민들이 YH사건과 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 등 유신권위주의에 대한 불의와 모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대통령 독재타도와 유신철폐를 외친 것이 바로 10·18항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표 2> 1979년 10월 부마항쟁의 전후의 주요 사건

발생 시기	주요 사건
05월 03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 정국 여야격돌 심화
08월 11일	-YH사건 발생
09월 08일	-김영삼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04일	-김영삼 의원직 박탈.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 고조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 사퇴서 제출 -공화당과 유정희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 제기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 배포. (부산은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
10월 16일	-부산에서 5천여 명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전개
10월 17일	-시위대, 정치탐압 중단과 유신헌법 타도를 외치며 파출소,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 등을 파괴
10월 18일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 확산 -정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 1천여 명 연행, 66명 군사재판에 회부
10월 20일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 발동. 군사 출동하여 시위대 중 505명 연행, 59명 군사재판에 회부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를 중심으로 한 과도내각 출범
12월 06일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으로 최규하 선출
12월 08일	-긴급조치 제9호 해제
12월 12일	-신군부에 의한 하극상 군사쿠데타

출처: (정주신 2017b, 154-155).

셋째,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인(人)의 장막’이 대통령을 끼고도는 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와 달리 측근들의 말을 듣는 정보 부족으로 정치를 해왔던 권위주의 대통령의 폐단은 시위의 발발요인이 되었다. 인의 장막의 성격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중요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위치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며 대통령집무실인 경무대(청와대)를 둘러싼 측근자들로 아주 조잡한 음모집단이라 할 수 있다(편집실 편 1984, 394).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이기붕이라는 측근자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차지철 같은 측근자가 있었다<표 3> 참조. 이기붕의 출발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로 우산이나 외투를 들어주거나 시간약속을 배정하는 측근이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서울시장직, 국방장관직, 국회의장직, 자유당 당수직을 역임하는 정치적 직책을 거쳤다. 그리고 정치가, 애국자, 기회주의자 및 부정축재자들의 보좌를 받아 거대조직화한 자유당을 강화하였고, 국립경찰이나 정치깡패들 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단체로 조직한 반공청년단에 이르기까지 이들과의 긴밀한 결속하에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역할을 해왔다(편집실 편 1984, 395). 그러다 4·26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시 국회에서 사

임서가 수리되고 3·15부정선거로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자 4·28 경무대 관사에서 일가족 4명이 집단 자살하였다. 한편 차지철은 1961년 5·16쿠데타에 공수여단 대위로 가담한 이후 1962년 당시 육군중령으로 박정희 소장의 경호장교로서, 제3공화국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공화당 상임의원, 1963년 공화당 전국구 의원, 1969년 국회 외부위원회에서 의정사상 최연소 상임위원장, 공화당 전국구(제6대 국회) 및 지역구(제7대, 제8대, 제9대 국회) 출신 국회의원 4선의 정계 중진을 두루 역임하였다. 유신체제 이후인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내무위원장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충실한 호위역으로서 국회 안에 행동적인 친위세력 옹립, 때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경호실장 시기(1974년 8월~1979년 10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군이나 정부기관 및 여야 정치권에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며, 1978년 무렵 단순한 보디가드의 영역을 넘어 국정에 간여하고 대통령 다음가는 2인자처럼 권력을 행사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끼고돌면서 국회나 행정부, 그리고 군부에 인사에 관여하고 상관에 대해서도 횡포와 오만 등을 저질렀으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살해되어 10·26사건을 맞았다(정주신 2017b, 117-118).

<표 3> 3·15의거와 10·18항쟁의 발발과 주요 특징 비교

구분	3·15의거	10·18항쟁	비교
의거/항쟁 발생	·3·15부정선거 항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 ·민주당 당원과 시민 합세	·10·16부산항쟁의 확산 ·시위발발 당시 군 투입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	차이
발생지(장소)	·창동네거리	·창동네거리	공통
시위 주최	·중고교, 대학생, 시민	·대학생, 고교생, 시민	공통
시위 구호 및 노래	·부정선거 중지, 이승만 물러가라, 협잡선거 배척, 공명선거 재실시	·독재타도, 유신철폐 ·불 꺼 불 꺼 ·애국가, 우리의 소원은 자유	차이
참여 인원	·2천여 명	·2천여 명	공통
참여 구성원 분포	·민주당 당원,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대학생, 소시민과 노동자, 고등학생	유사
연대 세력 유무	·없음	·없음	공통

	·1차 데모사건시 민주당원 주축, 이후 학생과 마산시민의 자발적 참여 ·경찰당국이 공산당의 조종 있었다고 조작, 사망자의 주머니에 불온문서 투입	·대학생과 마산시민의 자발적 참여 ·조작사건을 발표한 사례는 경찰이 1979년 부마항쟁을 남민전 사건과 연계성을 찾으려 했던 점	
인(人)의 장막 여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이기붕이라는 측근자가 있었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차지철 같은 측근자가 있었음	공통

출처: 필자 작성.

넷째, 대선 정국을 앞두고 내무부나 경찰이 조직개편을 통해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면서 시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전국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시키고, 이어서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하였다. 내무부는 1959년 11월부터 1960년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을 통하여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린다는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결국 3·15의거에서 마산사건 희생자가 1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가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는 말에 여론이 들끓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3월 18일 최인규 내무장관을 사임시켰고 대신에 23일 홍진기가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3·15의거가 공산당의 사주가 있다고 보았으나, 검찰은 공산당과의 연관에 아무런 확증이 없다고 밝혔다. 4·11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중앙부도에서 발견되자 학생들의 주동으로 시민 2만 명이 경찰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여러 파출소와 마산시청, 자유당 본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격파하며 마산경찰서 무기고에서 수류탄을 탈취할 만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분노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정권은 마산사건에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경진압을 강구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김대중 후보와 맞붙은 대선에서 언론조작과 사상논쟁은 물론 김대중

후보의 표를 무효화시키는 등, 개표부정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제3공화국 11년(1961. 5~1972. 10), 유신체제 7년(1972. 10~1979. 10)이지만, 특히 유신체제의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국민주권을 박탈한 시기이며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였고, 국회 무용론과 정당정치의 무력화로 일관했다. 비록 제3공화국 대선은 직선제였지만 이 또한 3·15부정선거와 결코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관련선거, 흑색선거, 사상논쟁선거, 여촌야도 선거구도, 막대한 자금과 공권력 동원 선거, 반공과 안보위협에 의한 장기집권과 그에 따른 민심이반 선거 등이 그것이다. 특히 부마항쟁과정에서 민중시위를 북한 공산당과 연계할 조직으로 남민전과의 조작사건으로 발표하는 등 흥계를 꾸미기도 했다.

<표 4>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발발 양태 비교

구분	3·15의거	10·18항쟁	비고
①시위 성격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집권 야육과 부정선거 노골화 ·민주당의 투표거부에 따른 자연발생적	·10·16 부산시위가 10·18 마산시위로 자연발생적 확산 ·부산시위 발생이 마산시위에 동기부여 제공	차이
②선동 연설	·민주당은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로 규정 ·선거무효선언	·부산시위에 따른 10·18 교내시위에서 정인권의 선동연설은 학교와 학생들 비난 ·유신체제의 제반모순과 동떨어진 선동연설 ·선동자의 이탈과 뚜렷한 주체 세력 없었음	차이
③야당 당사/교내시위	·교내시위와 무관 ·민주당원이 주축,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플래카드 들고 시민들에게 부정선거 폭로	·선동연설 이후 시위 지도부 없이 시위 목표와 방향이 없이 교내시위 실패 초래 ·경남대 교내시위가 경찰의 1차방어선인 교문을 뚫지 못하고 정체됨 ·교내시위의 불발과 3백여 명의 군중의 교문 안에서 경찰과의 대치로 실패 ·교내에서 일체의 시위구호나 시위노래 없었음	차이
④시위 농단	·시위 전개과정 농단과 무관	·교내시위 실패 이후 학교 뒤편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산복도로를 타고 도심 무학초교 앞으로 향하다 시위도 없이 경찰에게 최갑순·옥정에 돌이 평범하게 잡히고 정성기도 혼자서 다른 방향에서 서성이다 잡힘, 그레도 최갑순·옥정애가 10주년 자료집에 자필증언 해 놓고 수십년 간 자칭 주모자로 행세해 옴 ·자칭 주동자(?) 5인방(정인권, 최갑순, 옥정	차이

		에 정성기 등) 주도 괴뢰조직인 기념사업회가 10주년 자료집 펴내면서 자신들이 시위도 못했으면서도 3·15탑 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그들만의 경찰 공소장 게재하고 전개과정을 조작과 왜곡을 일삼고 진실 호도시킴, 결국 3·15의거 정신 부정 ·이들의 항쟁농단은 어떤 시인의 시집(詩集)에서도 미화·찬양시킴	
⑤도심 시위 발단	·3·15의거가 창동·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시작	·10·18항쟁이 18일 오후 5시 20분경 창동네거리에서 소수 인원이 첫 도심시위(창동→오동동 불종거리→기아백화점→불종거리) 주도	공통

출처: 필자 작성. *10·18항쟁의 경우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18, 20-21).

다섯째, 야당이 대선정국에 앞서 후보자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집권 세력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귀책사유로서 부정적이나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수록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하던 국민들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1956년의 신익희 야당 대통령 후보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신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지만, 2월 15일 조병옥 후보가 급서함에 따라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만 하였다. 국민적 실망과 좌절은 야권의 강력한 대통령 경쟁후보가 없어진데서 표출된 것이었으나,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을 바라는 민심을 읽는 척도가 되었다. 따라서 선거의 초점은 현직 부통령인 장면과 자유당후보인 이기붕 사이에서 전개되는 대통령직의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선거로 옮겨가게 되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자 정부·여당의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민주당은 4할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지령을 폭로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긴급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부정 및 불법사태를 엄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에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이후 3·15의거와 4·19혁명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자 타도의 물결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욕이 발미를 제공했다. 한편 집권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야당관은 야당 경쟁자와의 관계, 야당 창당 과정에 강패 동원,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YH사건 노동자들의 신민당 당사에서의 농성에 따른 사회문제화 등에 대한 부정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 데모만 해도 신민당이 계획해서 뒤에서 한 것인데, 중앙정보부는 수고는 많이 하는 줄 알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조갑제 1987b, 137-138)하면서 야당이 민중들의 시위를 조종했다는 발상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부정과 자신의 집권욕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부마항쟁과 야당 공작을 얘기하다가 10·26사건이 터진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엄연히 대통령의 권력 행태에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친 부마항쟁 때문이었다. 결국 선거전에 나타나는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과 체제위기사 나타나는 야당총재에 대한 폭거는 장기집권을 획책한 정부·여당의 체제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위 발발의 요인이었다.

여섯째,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선거와 야당 탄압이 학생과 시민들의 정권퇴진 시위를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3월 15일의 투표는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노골화된 형태로 야당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무효선언을 하였다. 개표가 시작되자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가 95%~99%까지 조작되어 나온 지역이 속출하였고, 이런 터무니없는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수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집계는 총투표자 1,000여만 명 중 이승만 960여만 명으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 명으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무효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의 장면은 184만여 표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와 개표상의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은 3월 15일 저녁 마산에서의 부정선거거탄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한편, 유신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직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제도적 장치 없이 무조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출 방법으로 강고한 종신집권을 위한 형식적

통과의례였으니, 이는 반(反)민주적 헌법에 불과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제8대, 제9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면, 두 번 다 박정희 후보가 유일한 후보자였고 경쟁자 없이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것은 반(反)민주성에 기인한 선거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박정희 1인만이 입후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359표 가운데 찬성 2,357, 무효 2표로써 유효득표의 100%,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총 2,578표 가운데 찬성 2,577표 무효 1표로써 역시 유효득표 100%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재적의원 수의 무효표 한 두 표를 제외한 99.9%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그의 계속 집권은 이상이 없는 것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 380; 정주신 2017a, 47-48).

일곱째,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유신철폐 시위는 권위주의 대통령으로서 경찰이나 군대 투입 혹은 정보기관을 활용하는 만연적인 체제 위기의 폐단을 보여주었다. 3·15의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집권야욕과 부정선거 노골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자 불의에 대한 항거로 이승만 정권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3·15부정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투표거부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 부마항쟁 과정에서 10·16항쟁이 10·18항쟁에 자연발생적 민중시위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위 발생이 마산시위에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10·18항쟁은 경남대 내 자체적으로 발발하기에는 유신의 권부인 박종규 사주가 있는 한 유신체제의 모순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10·16항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대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불규칙하고 주모자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따라서 10·16항쟁에 따른 10·18교내시위 선동연설은 학교와 학생들 비난투였지 유신체제의 제반모순과 동떨어진 선동연설이었다. 더욱이 교내시위가 선동자의 이탈과 뚜렷한 주체세력 없다보니 교문 앞에서 시위는 경찰의 교문 진입으로 무력하게 실패했다. 그 이후 일단의 새로운 시위세력이 도심시위를 위해 3·15탑과 창동에서 만날 것을 구두전달함으로써 도심시위가 창동네거리

서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10·18항쟁은 알단의 세력들이 시위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주년 자료집에 거짓증언으로 항쟁을 도둑질하며 자신들이 모든 시위를 모의하고 교내와 도심시위를 주도했다고 농단을 일삼아 왔다<표 4><표 5><표 8>참조.

여덟째, 집권욕의 강화와 부정선거 및 강압통치는 학생과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시위를 불러왔다.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욕을 강화했는데,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 등은 이승만 개인의 집권욕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변모해 갔으며, 이후 대통령 3선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3·15정부통령선거를 획책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3, 5인조 투표와 투표지 공개를 획책했는데, 이는 자유당은 물론 반공청년단의 노골적인 이승만 지지 및 공무원의 중립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 게다가 투표시 야당 참관인을 배제하거나 내통식 기표소로 유권자의 투표감시가 가능했다는 점 등은 강압적인 투표행태와 투표자의 비밀무시 및 투표자의 번호표 방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모순을 자아낸 선거였다. 이는 집권욕에 찬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부정선거 노골적 기획과 강압적인 투표방해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투표거부운동 동참을 초래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집권의 정당성이 취약하여 강압적인 통치방식을 내세웠는데, 이는 학생과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더하게 했다. 부마항쟁은 5·16과 유신, 두 차례의 쿠데타와 대통령 집권연장을 의도한 3선개헌으로 18년간 영구집권 해온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의 여러 가지의 모순투성이와 비정당성에 저항한 최후의 항거로 투쟁하였으나 10·26사건으로 미완의 항쟁으로 남겨졌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부산정치파동(계엄령선포로 폭력동원 및 국회의원 연행), 발췌개헌(대통령직선제 개헌), 사사오입개헌(대통령중임제 철폐)으로 독재정권 기반을 구축하다가 3·15정·부통령 부정선거와 마산(馬山)의 1차 3·15의거 및 2차 4·11의거와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 하야한 것에

비견된다. 특히 유신체제 시기에 긴급조치를 양산하거나 시위금지법 및 반공법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압살하면서 집권욕을 강화해왔으나 결국 부마항쟁으로 정권강화라는 권력의 부메랑이 정권을 붕괴하는 요체가 되었다.

<표 5>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전개과정 비교

구분	3·15의거	10·18항쟁	비고
①시위 범위	창동과 오동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마산 전지역	창동과 오동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마산 전지역	공통
②참여 계층	학생, 정당인, 시민 등	학생, 소시민, 자영업, 노동자 등	공통
③시위 구호	‘부정선거 개표 중단’, ‘부정선거 중지’, ‘협잡선거 처단’, ‘투표의 자유’, ‘공명선거’ 등	·도심 시위 구호는 ‘독재타도’ ‘유신철폐’, 이후 날이 어두워지자 정치적 구호보다는 ‘불 꺼’ ‘불 꺼’로 일관	차이
④ 시민·학생 참여 과정	·3·15당일,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에 의한 제1차 데모 ·이후 오후 7시30분, 천여 명의 시민들 마산시당사 앞에서 집결 행진 ·경찰의 실탄사격에 돌팔매질 후 군중 무학초교 앞에서 학생들과 합류	·주체세력에게 비정치적이고 약자이고 사회로부터 배제당해 온 신민(臣民)들 ·신민의 카테고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로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시민들 ·정당이나 야당의 경우 10·18당일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으며, 10·26이후 3김의 등장 배경 ·알단의 10·18항쟁 농단은 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을 통해 전개과정을 조작과 왜곡으로 일삼음	차이
⑤ 시위의 양태	·3·15일 오후 3시 30분경, 민주당 원이 주축이 된 마산 1차 데모 ·오후 7시 30분경 시민들 민주당 마산시당 앞에 집결 시위 ·경찰이 정남규 등 당 간부들을 연행하면서 강력히 대응하자 오히려 시위 군중은 더욱 늘어나 밤 8·9시경에는 만여 명이 넘음 ·이때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중 정전되자 경찰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는데, 경찰의 발포는 시위대를 더욱 분노시켜 경찰에 돌을 던지며 맞섬 ·경찰측의 실탄사격에 시민들 돌팔매질로 대응 후 분산된 시위대 무학초교 앞에서 학생들과 합세 ·군중들 서울신문 마산지국, 자유당 마산시당 등에 투척	·18일 오후 6시 40분경~ 7시 30분경 경찰의 부족으로 시위대가 도심을 장악했으나, 시위대가 도심의 특성상 분산·은신 이후 다른 변화가 재집결해 경찰병력을 분산 교란 ·마산시위의 경우 18일 오후 9시경 경찰과의 게릴라전술을 펼칠 수 있었음 ·시위는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점점 격렬 ·정권에 협력한 경찰서·과출소·언론사·차량 등의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방화 ·시민들의 반발을 무력화(paralyze)시키기 위한 조치	공통

	·4·11일 오후2시경, 김주열 오른 쪽 눈에 최루탄 박힌 시체를 목격 한 군중 1천여 명 ·이후 학생들의 주동으로 시민 2만여 명 경찰의 잔혹성을 규탄하는 데모 벌여		
⑥ 투쟁양상	·마산시청·자유당본부·국민회지부·서울신문 지사 일부 파괴, 그리고 마산시장 관사·우체국·소방서·마산일보사·형무소 등에 투석, 마산경찰서 무기고에서 수류탄 탈취	·정권측에 결부된 건물(파출소, 경찰서, 언론사)의 방화와 특정인(박종규 공화 의원)을 상대로 타격을 통해 이뤄진 질적 민주항쟁 규정	공통

출처: 필자 작성. *10·18항쟁의 경우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18, 20-21).

2. 시위의 전개과정

첫째, 시위의 전개과정은 도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무효나 대통령 타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마산 3·15 1차 시위는 마산 민주당 간부들이 주축이 돼 오후 3시 30분경부터 5시까지 시민들의 호응하에 남성동 파출소나 부림시장을 거쳐 당사 앞까지 시위를 하였다. 이들은 투표장 입장 번호표를 일부시민에게 나눠주지 않은 점, 민주당 참관인이 47개 투표소 중 2~3개에 불과한 점, 내통식 기표소 시설로 감시가 가능했다는 점, 3·5인조 투표와 투표지를 뒤집어서 접게 해 그 내용을 선거위원회에 보여주도록 강요했다는 점, 비자유당계 시민들의 투표용지를 빼앗고 선거위원이 다른 투표지에 무더기 투표하였다는 점 등 부정선거를 폭로했다(편집실 편 1984, 22). 이로써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해서 3·15의거가 마산으로 알려져 있다. 3.15 부정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적발되었고, 일부 도시에서 투표권을 우롱당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총기를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반면 10·18항쟁은 대통령 직접선거와는 무관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이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욕과 같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유신체제 하의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 장기집권을 획책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대학생들이 독

재타도와 유신철폐를 주장했고, 마산에서는 1979년 10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창동네거리 조흥은행 앞에서 소수 2~3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20명 안팎으로 불어난 선도시위대가 오동동과 가야백화점을 오가면서 독재타도와 유신철폐를 주장했다. 결국은 불종거리에서 2천여명의 민중들을 통합하여 도심의 해방공간을 마련한 것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왔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이 타국이 돼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장기집권을 획책해 부정선거로 정부통령직을 강구해 발생한 3·15의 거의 부정선거 규탄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찰과 군인의 과잉진압에 의한 시위진압이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15일 마산의 경우 아침에 장군동 제1투표소에서 민주당 참관인과 자유당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참관인이 투표함을 엮어버리자 그 투표함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되었다. 투표함을 엮어버린 참관인 안맹선과 그의 남편이자 민주당 도의원 정남규는 사전투표를 발견했으나 곧 경찰서에 끌려가 버린다. 경찰서로 끌려간 정남규는 도의원 신분이라서 곧 풀려났는데, 그는 곧장 오동동 마산시당부로 가서 민주당원들과 논의한 끝에 아침 10시 30분 독자적으로 선거포기를 선언하고 참관인들을 철수시킨다. 이후 방송을 통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당원들이 모여 시위에 시작한다. 민주당원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위대를 모았고 오동동 마산시당부에 1,5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는데 이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주당원들을 연행하고 시위대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자리를 떠난다. 특히 경찰 간부가 곧봉으로 고등학생을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더욱 격앙되었고, 남은 시위대들이 독자적으로 시위에 돌입하자 경찰과 반공청년단들이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시위대들은 저녁에 개표가 시작되는 시청으로 모이자고 서로 약속하고 해산하게 된다. 이에 반해 10·18항쟁은 3·15부정선거와 달리 18일 교내시위와 학교로부터 도심에 이르는 가두시위가 실패한 이후 새롭게 초기 2~3명

이 선도시위대를 이루고 점차 20여명이 창동과 오동동 불종거리에서 가야백화점과 불종거리로 오갔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2천여 명이 합세해 해방공간을 장악했다. 이후 오동동 다리 난간에 경찰트럭을 처박고 마산 박종규 의원 공화당사무실 파손에 이를 때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은 없었으나, 시위대가 다방면으로 분산되고 주변 파출소 방화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다. 그러나 18일 밤10시경부터 박정희 정권의 체제모순 타도를 외친 성난 학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생한 10·18도심시위는 경찰과 군의 동원에 의해 구타와 고문, 무자비한 진압 등 구속과 탄압이 이어졌다. 그 부메랑과 반대급부가 다름 아닌 김재규 정보부장의 부마항쟁 민란 보고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시위진압 경경론이었고, 그 결과 정보부장이 정권에 권총을 들이댄 것이 더이상 학생과 시민들의 살상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3·15의거나 10·18항쟁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관련자들을 공산당과의 연계성을 내세워 일망타진하려는 속셈을 보여주자 시위가 더 강화되었다.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이 마산시민들의 3·15의거를 조기에 차단시킬 목적으로 공산당과의 연계성을 운운하며 조작사건을 발표한 사례는 1979년 경찰이 부마항쟁을 남민전 사건과 연계성을 찾으려 했던 점과 다르지 않았다. 3·15의거 당시 마산의 학생 및 시민들이 격분한 나머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규탄시위를 벌인 것과 달리, 이승만 정권은 시민의 의거를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시위에 공산당이 개입했음을 주장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 박정희 정권도 부마항쟁을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항쟁관련자들을 탄압했으나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유아무야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의 탄압통치는 부마항쟁을 둘러싼 권부 간의 갈등이 비화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이다.

넷째, 도심 시위과정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더욱 가열차게 돌아가자 경찰의 진압은 더욱 거세어졌다. 마산시민들이 저녁 즈음 옛 마산시

청 앞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위 인원은 1만여 명을 넘을 정도로 불어났다. 일부는 당시 마산의 중심가였던 남성동 파출소로 모였으며, 일몰 후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던 중 시위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무학초등학교 앞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전기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정전과 동시에 신마산 일대가 깜깜해졌다. 경찰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시위대를 분산시켰다. 같은 시각 남성동 파출소에서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했으나, 경찰의 발포 이후 자극받은 시위대는 자정 무렵 때까지 마산의 관공서, 경찰서(및 파출소), 자유당사 등을 습격하며 저항했다. 한편 10·18항쟁도 18일 19일 양일간 도심시위를 장악한 이후 경찰 트럭을 오동동 다리난간에 빠뜨리거나 박종규 공화당 마산지부의 집기를 부수고, 관공서와 파출소 등에 방화를 하거나 세무서나 언론사 등에 돌을 투척하며 박정희 정권의 부역 집단에 거세게 저항하였다.

다섯째,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러진 데 대한 반작용으로 시위가 거세게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을 자행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득표율을 하향조정,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봉 833만 표(73%)로 나타났고, 민주당의 장면은 184만여 표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정부통령선거에 불법과 범법을 저지르며 이승만-이기봉 체제를 공고화하려 했으나, 결국 강압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의 3·15의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기봉 일가의 집단자살로 끝났다. 이후 연이어 터진 4·11의거와 4·19혁명으로 인해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은 하야로 막을 내렸다. 반면 유신체제 하의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통일주체국

민회의가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에 거의 99%로 당선되거나 국회의석 3분의 1을 지명하듯이 집권여당(공화당+유정희) 대 야당(신민당)을 1:0.5로 야당의 도전을 억제하면서 집권욕을 강화하던 차 10·16항쟁과 10·18항쟁을 시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박정희에게 부마항쟁은 민심이반에 의해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노하던 중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살해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처럼 이승만·박정희 두 권위주의 정권의 대통령이 뿌려놓은 자승자박 덩어리에 대통령 스스로가 걸리는 것처럼 권력의 부메랑 효과는 집권욕이 강한 대통령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진리를 보여준 사례였다.

여섯째,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방식은 뭉쳤다 헤어지며 경찰이나 군을 상대로 게릴라식으로 전개되었다. 3·15의거는 민주당 마산시당사 앞에 집결하여 행진하다가 과출소 앞에서 돌팔매질을 하거나, 경찰측의 실탄사격이 있을 시 시위대는 북마산과 시청으로 흩어지는 등 게릴라전술의 시위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게다가 북마산과 과출소 앞에서 경찰의 실탄사격에 돌팔매질로 맞서다 수많은 학생이 살상당했다. 반면 10·18항쟁의 경우 경찰과의 게릴라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마산의 경찰력이 부족했던 18일 오후 9시경 이후였다. 시위대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군과의 조우시 돌을 던지거나 과격한 방식으로 게릴라전술을 펼치면서 '치고 빠지는' '치고 달리는' '흩어졌다 재결집하는' 등의 전략으로 경찰과 군의 제지를 막아내고 적극적인 대응과정을 보여주었다(정주신 2018, 25). 그러나 이러한 게릴라식 시위방식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극적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경/군을 동원한 박정희 정권의 시위진압은 권부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종막을 고하는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의 살해를 불러왔다.

일곱째,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의거와 항쟁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직접 타도한 것이 아니라 4·19혁명과 10·26사건으로 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도화선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까지는 정권세력인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오랜 장기집권

으로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로 국민들은 장기집권에 심한 모욕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부정선거와 긴급조치 등 가혹한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독재자의 권력욕에 맞서 체제반대의 일환으로 학생을 필두로 시민들이 가세한 민주화운동이 발발하였으나 독재자를 타도한 것은 다름 아닌 4·19혁명과 10·26사건으로 귀의 됐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권력의 횡행과 폭력을 도구화한 권위주의 정권은 집권욕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체제내부의 갈등의 소산인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권력유지를 단축시킨 경우인데, 이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행한 민주화운동으로 독재자를 타도한 것과 달리 제3의 행동에 의해서 권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IV. 시위진압의 영향 및 결과

1. 시위진압

첫째, 3·15의거나 10·18항쟁시 시위진압은 1차적으로 경찰이 도맡았으나, 시간이 흐르고 진압이 불가할 때는 2차적으로 군 투입으로 시위진압을 하였다. 경찰은 지역내의 범죄를 소탕하거나 사회질서 유지를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어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나 집회 발생시 맨 먼저 출동하며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15의거 당시 경찰은 마산+창원+진영 등지의 경관 1백여 명을 총원하여 부정선거로 촉발한 마산시위를 전담하면서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 폭동·방화·소요사건을 담당하였다. 물론 10·18항쟁 당시 경찰은 대부분 유신 7주년행사로 서울에 집결하던 중 예상치 않았던 부마항쟁이 발발하자 부산과 마산에 경찰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두 지역의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 동원을 하였으나(마산서+창원서+진해서+고성서+함안서+기동대+경남본국 등지의 경찰 701명 동원) 성난 시위대를 진압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표 6> 참조. 그래서 경찰의

한계로 인한 시위진압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군을 동원해 시위진압에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3·15의거나 10·18항쟁 시 당국은 지역 군·경과 공수부대 투입과 위협 과정으로 시위진압을 하였다. 마산의거 당시 계엄령은 무관했으나, 4·19일 오후 1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사령관: 송요찬 중장), 오후 4시 30분 부산·대구·광주·대전 계엄 추가, 밤 10시에는 계엄군이 서울에 진주하여 시위진압을 하였다. 박찬궁 계엄사령관에게 마산은 당신의 책임 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조옥식 제39사단장을 지칭)과 의논 협조하여 시위진압을 할 것을 당부하였고, 마산·창원지역에 10월 20일 정오 12시 위수령을 선포하였다. 한편 3·15의거시기에 경찰은 3·15일 무학초교 전방 20m 전방에서 데모대 해산이 아닌 살상의 목적으로, 칼빈·M1·권총·기관단총 등 558발 이상 사격하여 사망자 16명, 중경상자 72명의 사상자를 냈다. 10·18항쟁시기에는 제39사단장 조옥식 소장을 위수사령관으로 하고 18일 지역 군(제39사령부)과 19일 제5공수여단을 투입했다. 제5공수여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찬궁 부산계엄사령관에게 지시하여 부산 도착 즉시 인근지역인 마산시위 진압을 위해서 18일 오후 11시 전후에 마산으로 급파했다. 공수부대는 데모군중도 아니고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은 많은 양민들의 머리를 가격하기 일쑤였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20일 정오 마산·창원에 위수령 선포와 군 투입으로 시위진압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마산지역에 10월 20일 정오 12시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인 18일 오후 10시 45분부터 군부대가 투입돼 37시간 불법적으로 시위대를 닦치는 대로 검거했다. 이들 병력은 10월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부산에 배치하고, 10월 18일 저녁 마산에 배치하고, 따라서 계엄군이 진압업무(‘충청작전’)를 장악하면서 시위진압을 완료했다.

둘째, 3·15의거나 10·18항쟁시 대통령의 그릇된 민주화운동 인식을 통한 강경진압은 많은 양민의 희생을 강요한 처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위원으로부터 마산사건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 학생데모를 관대하게 조치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며, 철저히 배후관계를 규명하여

의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자유당 독재정권의 제2인자였던 부통령 이기붕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폭압적 생각을 지녔다. 이들은 마산의거를 폭동·방화·소요사건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응징하고자 했다. 반면 10·18 항쟁 시기 박정희 정권이 강경진압으로 군을 투입해 타 지역과의 연대투쟁을 못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경진압을 예고한 박정희는 김재규의 부마항쟁이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하고, 지각없는 일부 학생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산과 마산 민중들의 자발적인 반유신 민중봉기가 아니라 야당인 신민당의 조종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체제위기에 대한 모든 촉각은 부마항쟁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 수집, 진압 쪽으로 풀가동 되었으나,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10·26사건으로 부하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면서 정권은 막을 내렸다.

셋째, 3·15의거나 10·18항쟁 시 대통령의 군 투입으로 시위과정을 진압하였다. 3·15의거 당시 계엄령은 무관했으나, 4·19일 오후 1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사령관: 송요찬 중장), 오후 4시 30분 부산·대구·광주·대전 계엄 추가, 밤 10시 계엄군이 서울에 진주하였다. 그러나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4·19시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끌어 이승만 정권이 해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했다. 만약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발포명령을 따랐다면 수많은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지구 박찬궁 계엄사령관에게 마산은 당신의 책임 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조옥식 제39사단장을 지칭)과 의논 협조하여 시위진압을 하라 독촉했고 당시 시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서 양민에 대한 발포명령이 없었다는 데서 4·19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일치성을 보였다. 결국 마산지역에 10월 20일 정오 12시 위수령을 선포하였으나, 더 이상 민중항쟁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시위가 확산되지 못했다. <표 7>에서 제시했지만, 10·18항쟁 시 마산지역의 경우, 「내부수사보고」에 따

르면, 연행자는 총 505명으로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6명(불기소 2명)이었다. 부산과 마산 두 지역 부마항쟁과 관련되어 연행된 자는 총 1,563명으로 훈방 총 792명, 즉심 총 651명, 민간재판 회부 총 31명(기소 11명), 군사재판 회부 총 89명(기소 87명)이다.

넷째, 3·15의거나 10·18항쟁 시 대통령은 공산당 조종이나 조직사건과의 연계시켜 시위진압을 하였다. 3·15일, 경찰은 마산사건을 공산당 조종으로 조작하기 위해 사망자 주머니에 불온문서 넣고, 부상자에게도 빨갱이라며 계속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3월 16 홍진기 내무장관은 담화문에서 공산당의 지령·사주에 개재되었다면 내란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29일, 자유당은 마산사건에 공산당의 사주가 있다고 본 반면, 검찰은 아직 마산사건에 공산당이 연관되었다는 확증 잡을 수 없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항쟁을 일련의 조직사건으로 묶어 항쟁의 확산을 차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부산과 마산을 오가며 두 지역의 시위를 파출소 방화나 공공건물 파괴, 그리고 민중들의 참여에 의한 내란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무시당했다. 부마항쟁을 북한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항쟁관련자들의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주장했으나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조직사건과의 연계작업은 유야무야되었다.

다섯째, 3·15의거나 10·18항쟁 시 지역별로 자체 시국비상회의 및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위진압을 앞당기고자 하였다. 3·15의거시 이승만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하겠다는 엄격한 어조로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마산의 적색분자 조사를 위해 군·검·경 대공3부 합동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위진압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10·18항쟁시기 10월 19일 상오 01시 30분에 마산경찰서에서 시국관련 비상회의 개최는 박종규 공화당의원, CIA장(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균범 경남도경 경찰국장, 전천수 경남도 교육감, 성해기 마산시장, 최창림 마산경찰서장, 조옥식 제39사단장(마산·창원지역 위수사령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민중의 시위행태가 민

란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화돼있었음을 보고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발포명령은 자신의 소관이라며 부마항쟁을 강고하게 밀어부칠 것이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되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에 빠져들었다.

여섯째, 3·15의거나 4·19혁명이 10·18항쟁과 다른 것은 경찰의 사제소총을 내세워 시위진압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10·18항쟁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로 시위대들이 방화과괴행위를 자행하고 화염병과 각목 등을 사용하고 사제총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부풀려 탄압과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나, 실제 사제소총 사용은 없었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억압할 사건조작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사제소총 징후 조작은 소요배후에 조직적 불순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유도, 경찰 자체의 조작과 진압을 강화할 목적이었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표 6>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진압 비교

구분	3·15의거	10·18항쟁	비고
① 진압 세력	·경찰(마산+창원+진양 등지의 경관 1백여 명 총원)	·18일, 경찰(마산서+창원서+진해서+고성서+합안서+기동대+경남본국 등지의 701명) 동원 ·19일, 마산기동대+피파출소 차출+부산기동대 등 총 898명 동원 ·군(지역군(39사), 공수부대(5공수여단))	차이
② 불순분자 및 폭도의 소요로 매도	·마산의거는 폭동·방화·소요사건	·우발적인 군중 시위행동이 아닌 조직적인 폭거로 조직적인 불순세력이 개입에 의한 소요로 파악 ·'식당보이''뿔마니''깡패' 등 불순분자들이 신민당의 조종에 의해서 지각없는 행동으로 규정	공통
③ 대통령의 그릇된 민주화운동 인식과 경진압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위원으로부터 마산사건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 학생대모를 관대하게 조치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며, 철저히 배후 관계를 규명하여 의법처리 할 것 지시함 ·3·15 부정선거 이후 자유당 독재정권의 제2인자였던 부통령 이기붕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충은 쏘라고 준 것이다"라고 말함	·박정희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타 지역과의 연대투쟁 못 치침 ·강경진압을 예고한 박정희는 김재규의 부마항쟁이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 ·지각없는 일부 학생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의 난동 ·자발적인 반유신민중봉기가 아니라 신민당의 조종으로 발생 ·박정희 정권의 체제위기에 대한 모든 촉각은 부마항쟁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 수집과 진압 쪽으로 풀가동	공통

<p>④ 불법 경과 부업협 대과 과업수령 (계위발 등)</p>	<p>·경찰, 3·15일 무학초교 전방 20m 전방에서 데모대 해산이 아닌 살상의 목적으로, 칼빈·M1·권총·기관단총 등 558발 이상 사격 ·사망자 16명, 중경상자 72명 ·마산의거 당시 계엄령은 무관했으나, 4·19일 오후 1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사령관: 송요찬 중장), 오후4시30분 부산·대구·광주·대전 계엄 추가, 밤 10시 계엄군 서울 진주 ·송요찬 계엄사령관, 군의 정치적 중립 입장으로 이승만 정권 하야에 결정적 역할을 이뤄냄</p>	<p>·마산지역에는 제39사단장 조옥식 소장을 위수사령관으로 하고 18일 지역 군(제39사령부)과 19일 제5공수여단(여단장 장기오) 투입 ·부산으로 가던 제5공수여단을 마산지역에 투입(박정희 대통령이 박찬궁 부산계엄사령관에게 지시) ·제5공수여단, 부산 도착 즉시 인근지역 마산시위 진압을 위해서 18일 오후 11시 전후에 마산으로 급파 ·18일 자정 0시에 부산지역에 계엄령 선포 ·공수부대는 데모군중도 아니고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은 양민들의 머리를 깨머리판으로 가격 ·이들 병력은 10월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부산에 배치가 완료되고, 10월 18일 저녁에 마산에 완료되고, 계엄군이 진압 업무(충청작전) 장악 ·10월 20일 정오 12시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인 18일 오후 10시 45분부터 군부대가 투입돼 37시간 불법적으로 시위대를 타치는 대로 검거 ·10월 20일 정오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선포와 군 투입</p>	<p>공동</p>
<p>⑤ 조직사건의 연계</p>	<p>·3·15일, 경찰은 마산사건을 공산당 조종으로 조작하기 위해 사망자 주머니에 불은문서 넣음, 부상자에게도 빨갱이라고 하며 계속 구타 ·3·16홍진기 내무장관 담화문에서 공산당의 지령·사주에 개재되었다면 내란이라고 주장 ·3·29일, 자유당은 마산사건에 공산당의 사주가 있다고 본 반면, 검찰은 아직 마산사건에 공산당이 연관되었다는 확증 못 잡음</p>	<p>·부마항쟁을 일련의 조직사건으로 묶어 항쟁의 확산을 차단할 목적 ·부마항쟁을 북한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항쟁관련자들의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주장했으나 10·26사건으로 유야무야됨 ·김제규 정보부장은 부산과 마산을 오가며 두 지역의 시위를 파출소 방화나 공공건물 파괴, 그리고 민중들의 참여에 의한 내란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무시당함</p>	<p>공동</p>
<p>⑥ 사제소들먹인 경찰</p>	<p>해당 없음</p>	<p>·경찰은 마산항쟁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로 방화 파괴행위를 자행하면서 화염병 각목 등을 사용하고 사제총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봄, 그러나 사제소총은 경찰의 조작이었음 ·경찰의 사제소총 징후 조작은 소요 배후에 조직적 불순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유도하려함</p>	<p>차이</p>
<p>⑦ 시국비상 및 위계 조원회 개최</p>	<p>·이승만 대통령 시국수습하겠다는 엄격한 어조로 담화문 발표, 정부는 마산의 적색분자 조사를 위해 군·검·경 대공 3부 합동조사위원회 설치</p>	<p>·10월 19일 상오 01시 30분에 마산경찰서에서 시국관련 비상회의 개최는 박종규 공화당의원, CIA장(김제규 중앙정보부장), 이준법 경남도경 경찰국장, 전천수</p>	<p>차이</p>

	경남도 교육감, 성해기 마산시장, 최창립 마산경찰서장, 조옥식 제39사단장(이후 마산·창원지역 위 수사령관) 등이 참석
--	--

* 3·15의거의 경우 필자가 작성한 것이며, 10·18항쟁의 경우 다음을 참조할 것 (정주신 2018, 20-21).

<표 7>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진압 방식과 결과

3·15의거 ~ 4·19혁명	10·18항쟁
진압 세력: 경찰	진압 세력: 경찰/군
-경찰, 3·15 당시 시위군중을 제압하기 위해 최루탄 발사기와 M1 카빈소총을 무장하여 현장에 투입 -자유당 독재정권 제2인자이자 부통령 이기붕 당선자의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고 한 말이 화제거리 -3·15 당시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 8명 사망, 72명 총상 입는 사건 발생 -4.11 3.15의거 당시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 오른쪽 눈에 직격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중앙부두 바다 수면 위로 떠올라 4.11 2차 마산의거 발발, 당시 약 1백여 명 사상자 발생, 다수의 시민과 학생을 검거·감금 -4·18 3·15 부정선거 후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습격당해서 다수의 부상자(학생 10여 명, 기자 3명, 경관 등)가 나왔고(‘4·18 의거’), 곧 4·19혁명의 시발점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 거처인 경무대 인근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140여 명 사망, 1천여 명 부상 -4·19, 11시 55분 경무대 정문에서 2시까지 경찰의 무차별 난사 -4·19, 경찰 계엄령이 선포된 오후 5시 이후 장갑차 동원해 반격개시, 시위군중은 파출소(전파 13개소, 반파 30개소) 불을 지르고 총을 탈취해 경찰에 응사 -4·19, 시위 발포자 서울 시경국장 유충렬(중앙청 앞), 경무대 앞(박영주 대통령 경호실장, 홍진기 내무장관)	-부마항쟁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은 폭행과 가혹한 신문(訊問)이나 고문 수사 및 사건 조작 등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비인간적인 폭압성을 보여줌.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진압봉으로 무자비한 폭행은 물론 물고문을 비롯한 온갖 가혹한 고문과 탄압을 일삼음. 시위자들에게 사건조작이나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조서 작성. 대로변에서 무차별 폭행, 옷 벗기기, 무릎 꿇리기, 원산폭격, 수갑차고 포승줄로 압송, 잠 안 채우기, 고문, 언어폭력 등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공공연히 자행 -마산에 위수령 선포 이전인 18일 오후 10시 45분에 지역군 제39사단 투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오후 11시경 마산에 제5공수(여단장 장기오) 병력을 투입, 계엄군이 진압 업무(충청작전)를 장악 -마산시위 진압을 위해서 18일 오후 11시경 제5공수 투입된 시점은 부산에 비상계엄령(18일 자정 0시)이 선포되기 1시간 전이고, 마산에 위수령(20일 정오)이 선포되기 37시간 전에 급파할 가능성 높음 -10·18항쟁 시 마산지역의 경우, 「내부 수사보고」에 따르면, 연행자는 총 505명으로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6명(불기소 2명)이었다. 부산과 마산 두 지역 부마항쟁과 관련되어 연행된 자는 총 1,563명으로 훈방 총 792명, 즉심 총 651명, 민간재판 회부 총 31명(기소 11명), 군사재판 회부 총 89명(기소 87명)

출처: 필자 작성.

2. 영향 및 결과

첫째, 3·15의거와 10·18항쟁은 비(非)수도권에서 이룬 민주화운동으로서 중요한 토대를 이뤘다. 우선 비수도권 마산의 3·15의거가 수도권의 4·19혁명으로 점화되어 이룬 쾌거는 12년 세도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런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에서 발생한 3·15의거 이후 근 20년 만에 10·18항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남도 부산에서 발화된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운동인 10·16항쟁이 인근 마산으로 확산돼 10·18항쟁으로 촉발된 것은 박정희 정권 18년 세도를 붕괴시키게 된 10·26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마산의 민주화운동은 3·15의거와 10·18항쟁의 기념비적인 역할로 한국에서 민주화의 성지로서 마산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도 마산의 불의에 대한 항거의 결과요 이러한 항거의 생명력은 부마항쟁 이후 5·18광주항쟁, 6월항쟁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경남대 10·18교내시위가 부산대 10·16교내시위와 같이 시위모의팀(?)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발생적 시위가 발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차이점은 10·18시위를 앞두고 당일 3·15탑 주변 무학초교 앞에서 경찰 2인1조에 평범하게 잡힌 세 명이 자신들의 시위과정과 기록물 편집을 왜곡하며 조작해 농단했다는 점이다<표 4><표 5><표 8> 참조. 이로써 10·18항쟁은 경찰이 피의자조서 작성시 지목당한 5인방(?)이 스스로 주도자(?)인 양 3·15정신을 비웃듯이 마산항쟁을 도둑질하고 항쟁농단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3·15의거와 큰 차이점을 드러냈다. 결국 10·18항쟁 농단세력이 교내시위와 도심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1989년 10월에 펴낸 ‘부마항쟁 10주년 자료집’ 마산편 증언과 2011년 펴낸 ‘부마항쟁 증언집’ 마산편 증언 부분에 5인방(?) 그들이 10·18항쟁을 주도한 것처럼 농단해온 것은 마산시민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질서를 뒤흔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욕이 강한 만큼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변칙과 불법을 저질러 부정선거로 일관하려 했지만, 국가의 민주

화가 되기 위해서는 독재자가 존립해서는 안 되고 승자독식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과 시민들 및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불의에 항거해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3·15의거의 경우 직접 독재자 타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3·15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해낸 미완의 의거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0·18항쟁도 독재자를 직접 타도하지 못한 미완의 항쟁이지만 난공불락 유신체제의 영원한 집권자 박정희 대통령을 10·26사건으로 무너트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

넷째, 3·15의거와 10·18항쟁의 배경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자신이 만든 밧에 자신이 걸려드는 자승자박의 결과였다. 3·15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을 위해 관변선거와 부정선거를 피한 것이 권력의 부메랑이라는 반작용이 덧이 돼 이승만 정권을 옥죄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 정권을 잃게 되었다. 10·18항쟁은 민중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의 모순에 항거하자 체제내부의 갈등으로 촉발되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것처럼 10·26사건 부메랑으로 비화되었다. 이점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집권을 위해 세도정치를 감행하겠다는 발상은 권력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3·15의거나 4·11의거 및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하고, 10·18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에게 살해되는 10·26사건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다섯째, 3·15의거와 10·18항쟁의 전개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부 장악과 대통령 최측근의 인의 장막에 가려진 정권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시 정권 내부의 권부간 갈등 없이 이기붕에 의한 인의 장막에 막혀 오히려 집권 자유당이 이승만-이기붕 정부통령 당선에만 총매진한 결과, 권부에 의한 대통령불상사를 불러온 것이 다름 아닌 3·15의거였다. 부산과 마산의 부마항쟁은 김재규 정보부장이 직접 두 현장에서 느낀 바, 그것은 단순한 학생데모가 아닌 대부분 민간인에 의한 ‘민란’으로 보고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했다. 또한 서울 및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

44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2019 가을)

지도 모를 민중봉기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발표 명령 내릴 것으로 장담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 김재규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시위진압에 대한 강경론을 설파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인의 장막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판단이 미약한 결과 10·26사건을 불러온 이치였다.

여섯째, 3·15의거와 10·18항쟁에서의 사망·부상자·체포자 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15의거 당시 사망 8명, 중경상 72명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만 보아도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는 물론 무력에 의해 집권욕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진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3·15때 시위 도중 행방불명된 김주열 오른쪽 눈에 최루탄 박힌 채 마산 앞바다 부두에 떠오른 시체를 발견된 것이 그 예인데, 이로 인해 4·11의거가 3·15의거의 재점화로 나타났으며 결국 4·19혁명으로 발화되었다. 반면 10·18항쟁 당시 사망자는 없었으며, 연행자는 총 505명이고 구체적으로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6명(불기소 2명)이었다. 기타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영향과 결과 비교는 <표 8>과 <표 9>를 참조할 것.

<표 8>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영향과 결과 비교

구분	3·15의거	10·18항쟁	비고
①비(非)수도권에서 이룬 쾌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5의거는 3·15정부통령선거 부정선거로 접철돼 일어난 사건 · 비(非)수도권마산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시위였고 사망자도 초래 · 비수도권 마산의 3·15의거가 4·19혁명으로 점화시킨 수도권 시위로 탈바꿈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12년 세도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 ·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에서 발생한 시위가 3·15에 영향을 받아 근 20년 만에 10·18항쟁에 영향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 부산에서 발화된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인근 마산으로 확산 ·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 마산에서 발생 · 남도 부산에서 발화된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인근 마산으로 확산돼 박정희 정권 18년 세도를 붕괴시킨 10·26사건의 기폭제 역할 ·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에서 발생, 마산 3·15의거의 후예로 거듭나 · 부마항쟁은 이후 5·18광주항쟁, 6월항쟁에 영향을 줌 	공통
②대통령의 상황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의 의도대로 4선 대통령에 임했으나 야당 후보가 도중 급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과 마산의 항쟁은 김재규 정보부장의 직접 현장에서 느낀바 그것은 단순한 학생테모가 아닌 대부분 민간인 	공통

<p>착오</p>	<p>함에 따라 자신의 후계자인 이기붕 당선에 불법선거 자행, 그러나 4·19전후 서울 및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민중봉기에 대한 대응책 모색하고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송요찬 계엄사령관의 군정적 중립으로 대통령의 하야 앞당김</p>	<p>‘민란’으로 보고했으나 박정희 대통령 거부 · 서울 및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민중봉기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대통령이 발표 명령 내릴 것으로 장담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 김재규로부터 살해됨</p>	
<p>③정권 내부 권 부간의 갈등 유 발 여부</p>	<p>· 이승만 정권 하의 정권 내부적 권부간 갈등 없이 이기붕에 의한 인의 장막에 막혀 오히려 집권 자유당이 이승만-이기붕 정부통령 당선에만 총매진 불상사</p>	<p>· 부마항쟁은 박정희 대통령 지근의 김재규 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간 권부 권력다툼으로 비화됐으나 차지철의 인의 장막으로 기머 김재규의 권부에서 배제 · 10·26사건 촉발로 김재규 정보부장이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 살해</p>	<p>차이</p>
<p>④민주 화운동 의 연 계성</p>	<p>· 1960년 3·15의거는 4·19혁명 뿐만 아니라, 근 20년만인 1979년 10·18항쟁에 지대한 영향을 줌</p>	<p>· 민주화의 성지 3·15의거의 영향으로 민중들의 자발적 항쟁으로 10·18 항쟁 발생 · 박정희 대통령과 권부 내 갈등으로 10·26유발 · 10·18항쟁은 1980년 5·18항쟁과 1987년 6월항쟁 등 항쟁사를 승계함에 정치적 의미 부여</p>	<p>공통</p>
<p>⑤항쟁 농단</p>	<p>· 3·15의거가 불의에 항거한 유명세를 얻었듯이 시위과정을 농단하지 않았음</p>	<p>· 경/검이 지목한 일단의 세력 5인방 몇몇(최갑순·옥정애·정성기)은 10주년 자료집과 마산 증언집 등에 평범하게 잡히고도 경찰을 매도하며 인권 모독 해냈다고 거짓증언과 왜곡, 국가를 기망해 국가배상금 타냄 · 10·18항쟁의 농단은 3·15의거의 불의에 항거한 유명세와 민주화의 성지를 짓밟는 불법을 저지름, 이 또한 범법자들이 3·15의거나 4·19혁명 및 10월 부마항쟁을 난도질한 항쟁농단</p>	<p>차이</p>
<p>⑥미완 의 시위 결과</p>	<p>· 3·15당시 직접적인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지 못하고 4·11의거와 4·18의거 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권좌에서 하야를 이끌어낸 미완의 의거</p>	<p>· 부산과 마산에 고립된 부마항쟁으로 성격으로 규정 ·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을 직접 타도하지 못한 채 10·26사건에 견인자 역할, 미완의 항쟁</p>	<p>공통</p>
<p>⑦경찰 /군 대 동원</p>	<p>· 경찰의 실탄사격, 무학초교 20m 전방에서 데모대 해산시 살상 목적 · 갈빈·MI·권총·기관단총 등 55발 이상 사격</p>	<p>·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행과 허위 피의자조서 · 10·18 오후 11시경 위수령 앞서 39사단 병력과 5공수여단 투입 · 10·20 마산·창원 위수령 · 부마항쟁에서의 경찰과 군의 발표는 없었음</p>	<p>차이</p>

<p>⑧사망, 부상자, 체포자 수</p>	<p>·사망 8명, 중경상 72명</p>	<p>·사망자 없음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6명(불기소 2명)으로, 연행자는 총 505명</p>	<p>차이</p>
<p>⑨의거 / 항쟁의 영향</p>	<p>·3·15때 시위 도중 행방불명된 김주열 오른쪽 눈에 최루탄 박힌 채 발견(4·11의거 배경) ·4·19혁명으로 발화 ·마산의 3·15의거가 10·18항쟁으로 승화, 항거의 민주화 성지로 자리매김</p>	<p>·10·16항쟁이 10·18항쟁으로 확산 ·10월 부마항쟁이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10·26사건)의 건인차 역할 ·10월 부마항쟁이 5·18항쟁, 6월항쟁으로 발전하는 민주시위의 교과서적 역할</p>	<p>공통</p>
<p>⑩권력의 부메랑 효과</p>	<p>·3·15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을 위해 관변선거와 부정선거를 꾀한 것이 덧이 돼 4·19혁명을 초래돼 대통령이 아하함</p>	<p>· 시민들의 열정이 체제내부의 갈등으로 촉발되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 10·26사건 부메랑으로 비화</p>	<p>공통</p>
<p>⑪재판 회부자 처리</p>	<p>·4·19혁명 후 이승만 정부, 자유당, 경찰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재판은 5·16군사정권으로 넘어간 끝에 최인규는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관련자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았으나 감형, 특사</p>	<p>·10·26사건 후 김재규 전 정보부장 과 김계원 비서실장, 정승화 계엄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 등이 재판을 받았고, 김재규는 사형에 처해졌고 정승화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나 이후 복권</p>	<p>공통</p>

출처: 필자 작성. *10·18항쟁의 경우 다음을 참조한 것임(정주신 2018, 30-31).

<표 9> 3·15의거와 10·18항쟁 이후의 영향과 결과 비교

3·15의거의 영향과 결과			10·18항쟁의 영향과 결과		
<p>3월5일</p>	<p>정부통령 부정선거</p>	<p>·관권선거, 폭력선거 ·이승만·이기붕 정·부통령 당선 무효화 시위, 부정선거 획책 정권연장 음모</p>	<p>10월18일</p>	<p>·부산지역, 계엄령 선포 ·계엄군 작전 회의 개최 ·해병대, 공수단(부산에 1, 3공수여단, 마산에 5공수여단) 파견 등</p>	<p>·부산지역 경찰의 방어선 무력화 ·군대 동원</p>
<p>4월11일</p>	<p>김주열 학생, 오른쪽 눈에 최루탄 박힌 채 발견</p>	<p>·마산 등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당선 무효 규탄 등 전국적 시위 재발단</p>	<p>10월20일</p>	<p>·마산·창원지역, 위수령 선포</p>	<p>·마산지역 경찰의 방어선 무력화 ·군대 동원</p>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경찰의 총기 사용	10월25일	·부 산·마 산 항 쟁 관 련 자 87명, 부산구 치소에 수감	·구속자 수(군사 재판 46명, 민간 재판 5명) ·부산 15p 헌병대 ·군법회의 회부
4월 19일	4·19혁명	·전국적 시위와 경찰의 발포	10월26일	·10·26사건	·박정희 대통령사망
4월24일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총계직 사임	10월27일	대통령 대행. 최규하	·대통령 대행에 최규하 국무총리 ·제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 선포
4월 25일	교수단 시위	·서울 제외 비상계엄 해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동참			
4월 26일	민 주 화 시 위 의 승리	·이승만 대통령 하야 ·계엄사, 이날 시위로 사망 24명, 부상 113명 발표 ·전국 사망자, 서울 144, 부산 17, 마산 15, 광주 8명 등 모두 184명, 부상자 6천여 명	11월26일		·육본검찰부, 김재규·김계원 등 8명 내란목적살인죄 적용
			11월27일	부마항쟁 관련자 징역 선고	·계엄군재, 부마항쟁 관련자 20명에 최고 징역6년~징역 2년 실형선고
			12월4일		·김재규 등 8명, 첫 재판 공개
4월27일	4·19와 4·26 희생자	·보사부, 4·19와 4·26 희생자 160명 발표	12월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	·대통령에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선출
4월28일		·이기봉 일가족 4명 집단 자살	12월7일		·긴급조치 9호 해제
5월16일	·5·16 쿠데타	·박정희 소장 중심의 육사2기와 8기의 참여	12월12일	·12·12 쿠데타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 중 총격사건 발생 ·신군부세력의 군권장악

출처: 필자 작성.

한편 3·15의거와 10·18항쟁 이후의 정치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표 10><표 11> 참조. 3·15의거의 발생이 결국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10·18항쟁이 결과적으로 10·26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하의 외무장관이 권력서열에 따라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의 헌법 제정과 총선을 거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숙명

을 지냈다. 그에 따라 들어선 장면 정부는 혁명적 방식으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운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혁명적 방식 의존과 사회적 분열 조장 및 신군과 간 분열과 내분에 허덕이다가 불법적인 5·16 쿠데타를 맞았다.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하의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필연을 지냈다. 최규하 과도정부는 민주적인 방식과 새로운 권력구조를 잠정적으로 발표하는 등 정치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은 하나회 신군부의 겁박, 즉 신군부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10·26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없이 연행한 군의 하극상 사건인 12·12쿠데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그로부터 신군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따라서 3·15의 거나 10·18항쟁은 마산의 민주화운동으로 굳건히 민주화 성지로서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군의 집권을 허용하게 되었다. 결국 3·15와 4·19에 의한 허정 과도정부-장면 정부도, 10·18항쟁에 의한 최규하 과도정부도, 각각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에 이은 5·17쿠데타로 군부정권을 허용함으로써 영구적인 미완의 민주화운동으로서의 한계를 간직하고 말았다.

<표 10> 3·15의거와 10·18항쟁 이후의 정치변동 비교

3·15의거 이후		10·18항쟁 이후	
사건	비고	사건	비고
3·15의거 발발	·3·15일 오후 3시 30분경, 3·15 부정선거에 맞서 창동·오동동의 민주당 마산시당 앞 첫 시위 ·당선된 이승만 정권 타도 1차(3·15)의거 발생 ·4·11 마산앞 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군 주검으로 2차(4·11)의거	10·18항쟁 발발	·10·18일 오후 5시 20분경 창동네거리 조흥은행 앞에서 소수에 의한 도심시위 첫 발생, 이후 불중거리에 2천여 명 운집으로 도심시위 민중항쟁으로 발전 ·10·18항쟁, 유신체제로 종신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독재에 결사 저항 ·독재타도, 유신철폐 시위구호
4·19혁명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	10·26사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 살해
허정	이승만 정부 외무장관 출신	최규하	·박정희 정부 국무총리 출신

과도정부			·신군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납치 후 대통령 재가 받음 (12·12쿠데타)
장면 정부	·9개월 단명 집권 ·민주당 내분 ·혁명의 비혁명적 방식 의 존과 사회적 분열 조장 ·5.16쿠데타로 중단	과도정부	·5·17쿠데타와 5·18광주항쟁, 신군부의 압력 받음 ·집권 8개월만인 8월 16일 사임
5·16쿠데타	·새벽 3시 30분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보병, 해병대, 공수부대와 탱크로 서울 진입	5·17쿠데타	·전두환 중심 하나회 신군부 정권 전면 등장
장면 정부 퇴진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퇴진	전두환 군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군정) 조직
박정희 군정	·군사혁명위원회(군정) 설치	전두환 정부	·최규하 하야 ·유신헌법으로 8월 27일 전두환 군사정부 태동
박정희 정부 성립	·3공화국 ·유신체제 18년 집권	전두환 정부 재성립	·5공화국 헌법으로 전두환 재 집권 ·노태우 정부로 권력승계

출처: 필자 작성.

<표 11> 3·15의거와 10·18항쟁 이후 정부당국의 수습 및 대처방식

3·15의거 이후	10·18항쟁 이후
-15일 발표 사건 이후 여야합동 국회조사단 파견, 이강학 치안국장 사임, 최인규 내무부장관→홍진기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만 교체해 사건 수습 -홍진기 신임 내무장관의 공산당 사주설 주장, 경찰의 실탄발포 지시 이후 강경 진압 주도 -3·15의거 및 그 후속타인 4·11의거와 4·19혁명 등 일련의 학생시위와 이에 대항하는 계엄령선포가 초래 -4·19 오후 1시 정부, 비상계엄선포(계엄사령관 송요찬 중장), 계엄업무를 총괄한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의 정치적 중립, 이승만 정권의 몰락 앞당김 -4·21, 계엄사 사망자(민간인 111명, 경찰 4명), 총부상자 727명(민간인 558명, 경찰 169명) -4·25 오전 5시, 서울 제외한 전역에 비상계엄 해제, 경비계엄 대체 -4·26, 전국 사망자: 서울 144, 부산 17, 마산 15, 광주 8명 등 184명, 부상자 6천여 명 -10·26, 이승만 대통령,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는 표명으로 하여 발표 -4·27,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 대통령 사임	-10·18 자정, 부산지역에 계엄령 선포 -박찬근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계엄 포고 제1호 발표(집회·시위·언론·출판 등 금지) -18일 오후 5시 20분경, 마산 창동일대 도심시위(공화당사 파괴 등) -10·20 정오,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 발동 -20일 최창림 마산경찰서장, 소요의 특징이 단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것, 화염병·각목·사제총까지 사용이라고 발표 -부산과 마산 관련 부마항쟁 연행된 자는 총 1,563명으로 훈방 총 792명, 즉심 총 651명, 민간재판 회부 총 31명(기소 11명), 군사재판 회부 총 89명(기소 87명) -마산지역의 경우, 경찰의 「내부수사보고」에 따르면, 연행자는 총 505명으로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 기소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 기소 46명(불기소 2명) -10·26사건, 김재규 정보부장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10·27 정부, 대통령 대행에 최규하 국무총리, 제주도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10·27, 신군부 전두환 보안사령관, 김재규 내란 목적 체포, 김계원 비서실장 검거

<p>서 수리, 허정 수석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4·28, 이기붕 일가족(본인, 처, 강석, 강육) 집단자살 -4·29, 3·15부정선거 수괴인 최인규 구속 -5·3, 학도호국단(1949.9.26.이래 존속) 해체, 어용교수 퇴진운동 -5·4, 3·15부정선거 구체적 실천자 이강학 경찰에 자수 -6·15,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이승만 정권하의 국회 통과 -7·29, 제2공화국 첫 민·참여원 선거, 양원에서 민주당 압승 -8월,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각각 선출</p>	<p>-10·27, 정승화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발표 -11·6,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은 김재규 전 정보부장 및 그 일당과 김계원 비서실장의 배후 없음 발표 ·11·27, 계엄군제, 부마항쟁 관련자 20명 최고 징역 6년~징역 2년 실행 선고 12·12, 전두환 중심 보안사령부,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 총격사건 발생</p>
---	---

출처: 필자 작성

V. 결론: 비교적 관점

이 논문은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갖는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고, 이 두 운동이 근 20년의 시대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공통적인지, 아니면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3·15의거와 10·18항쟁의 두 민주화운동 사례는 모두가 독재정권을 직접 타도하지 못한 미완의 사건들이다. 3·15의거는 그 후속타인 4·11의거로 분출돼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4·19혁명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10·18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민중들에 의한 군부정권 타도라는 항거에 부산의 비상계엄령과 마산·창원의 위수령으로 진압한 군의 동원, 박정희 정권이 강화해 온 중앙정보부와 대통령경호실 간의 갈등을 부추겨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실장을 살해해 박정희 정권을 마감 짓는 10·26사건을 촉발을 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마산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에 결정타였지만 미완으로 끝났다는 데서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각각 12년 집권, 18년 집권을 해 오면서 집권욕이 발동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불법과 탈법이 더욱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이 몇 차례의 헌법 재개정을 통한 집권의 발판을 다져왔고 3·15 정

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미국에서의 급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저절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승운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권력승계의 일환인 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자유당과 공무원 및 반공청년단 등이 부정선거에 혈안이 돼 집권욕을 피한 것이 국민의 반감을 사고 결국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군부정권의 특성상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다 보니 몇 차례의 헌법 재개정을 통해 집권욕을 강화시켜 왔다. 특히 유신헌법의 제도화는 대통령 1인의 영속집권을 가져오는 대통령 1인의 출마와 당선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와 반공법과 시위금지법으로 장기집권을 피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국민적 반감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정권의 형성과 붕괴를 재촉한 바로미터는 정권 악순환이라는 인과관계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준 셈이다.

이 논문은 권력의 부메랑 효과로 3·15의거와 10·18항쟁을 비교 분석한 글이다. 기존의 민주화 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자유화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경향이 있어 왔고 일면 타당성도 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은 그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경무대(청와대)라는 대통령직무실을 단위로 하는 권력의 단일화에 목숨을 걸고 유지되어 왔다는 데서 그 요체를 찾을 수 있다. 국민들과 유리되고 장벽만 높아가는 대통령직무실이 일단의 권부 세력들에 의해 그곳을 요새화하고 정권연장이라는 바탕 하에 장기집권을 해온 경향이 농후한 만큼 한국의 실정상 대통령직무실 중심의 통치가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계는 바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지속 효과를 계속 펼치고자 했던 점과 그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권력에 의해 자승자박되어 목숨과 권력을 잃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볼 때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전개과정과 진압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면 3·15의거와 10·18항쟁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에 끼친 의

미를 적요하고자 한다.

우선,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 전개과정 비교는 <표 3><표 4><표 5>와 같다. 3·15의거와 그 후속타인 4·11의거에 이은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10·18항쟁도 10·16항쟁에 기인되어 박정희 정권이 타도되는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온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3·15의거나 10·18항쟁은 독재정권을 직접 타도하지 못하고 뒤늦게 4·19혁명으로 독재자가 해야하거나 10·26사건처럼 독재자가 부하에게 살해되어 신군부의 득세가 이뤄진 만큼 미완의 의거이자 미완의 항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4·19혁명은 궁극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고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고 상·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등 그동안 독재자의 권력점유물인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로 탈바꿈하는 혁명적 방식에 일조를 한데 비해, 10·26사건은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켰음에도 새로운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부로 나가지 못하고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 신군부의 집권과 5·18광주항쟁 발발 초래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치변혁이 이뤄져 민주화의 긴 과정 속으로 실타래가 꼬여 들어갔다.

둘째, 3·15의거와 10·18항쟁의 시위진압 비교는 <표 6>와 같다. 3·15의거와 10·18항쟁을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그 사건의 시차가 근 20년에 가깝다고 했을 때 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점은 불순분자 및 폭도들의 소요로 매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인식과 강경진압, 마산의거 당시 계엄령은 무관했으나, 4·19일 오후 서울과 주요 지방에 계엄령 발포와 부마항쟁 시 부산에 계엄령, 마산에 위수령 선포, 3·15의거의 공산당 조종과 10·18항쟁의 난민전 조직사건과의 연계, 시국비상회의 및 조사위원회 개최 등이 있으며, 차이점은 진압세력이 3·15의거 당시 경찰에 의존했으나, 부마항쟁은 애초 경찰과 군의 투입, 10·18항쟁 시 사제소총을 들먹인 경찰, 부마항쟁 시 불법적 지역 군경과 공수부대 투입과 위협 과정에서는 3·15의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마항쟁이 10·26사건으로 이어져 민주화를 바랐으나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5·18광주항쟁시기 신군부는 부마항쟁 과정에서 진압군으로 내려온 제1, 3, 5공수부대를 또다시 진압군으로 보내는 등, 민주화를 압살하고 또다시 군부정권을 태동시켰다.

결과적으로 마산의 민주화운동은 3·15의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속 타인 4·11의거와 4·19혁명을 이뤄냈듯이 3·15의거 이래 거의 20년 만에 민중항쟁으로 발발해 군부정권 타도와 유신철폐를 외친 10·18항쟁과 연동된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꺾하려 한 3·15 부정선거가 촉발되어 발발한 민주항쟁에 기원을 둔다. 3·15의거와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만에 재발진된 4·11의거와 4·19혁명으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처럼 집권욕의 덫에 빠진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0·18항쟁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제반 체제모순에 대한 도전이자 항거로 대학생과 시민들의 열정이 유신체제 내부의 갈등으로 촉발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10·26사건)되는 단초가 되었다.

3·15의거가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마산 민주당에서 촉발되었고, 그 이후 시민들의 동참이 있는 다음 고교생이나 중학생까지 동참해 불의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섰다는 점에서 4·19혁명을 생취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부마항쟁에서 부산과 마산 두 지역의 계층은 초기에 교내시위와 도심시위 모두 대학생이 선도적 역할을 했으나 어두워지자 도심시위는 소시민, 기층민중, 노동자, 영세상인, 도시의 빈민들이 동참하면서 항쟁의 꽃을 피웠다. 이 또한 10·18항쟁이 군부 독재정권에 협력한 공공관서, 파출소, 지구당 사무소, 방송국 등 독재자 권력에 결부되었던 공공건물이나 국가권력 기구들이 파괴 내지는 방화에 이르는 민중봉기의 형태를 지녔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3·15의거와 10·18항쟁은 질적 규정상 민중항쟁이라 할 수 있고 민중들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독재자를 타도했다는 점에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3·15의거와 10·18항쟁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직

접 붕괴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체제 내부의 갈등과 정치변혁을 유발시켰다. 3·15의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이기붕 일가의 자살,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 부정선거 지위체계 관련자들의 처형 등이 이뤄졌다. 반면 10·18항쟁 후 이어진 체제내부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10·26 사건으로 비화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후 김재규 정보부장의 경우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의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5·18광주항쟁 초기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처형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므로 군부의 등장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은 민주화운동의 필연성을 불러들인 정당성 없는 정권임에 틀림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산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으로 직접적인 정권타도에 이르지 못했으나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는 데서 기폭제 역할을 해낸 것은 한국정치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을 척결하는 데서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는 독재자가 권력의 부메랑이란 덧을 놓고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강경론을 펴 결국 정권의 붕괴를 자초한 것이어서 3·15의거나 10·18항쟁이 희석되는 감은 있지만, 이후 한국현대사에 5·18항쟁과 6월항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0·18항쟁의 경우 시위를 전혀 하지도 않은 세력들이 항쟁의 전개과정을 도둑질해 자신들이 한 시위이고 더 나아가 주도했다고 건강부회하면서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장악하고 자신들만의 증언집을 펴내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기까지하다<표 4><표 5><표 8> 참조. 10·18항쟁은 마산의 3·15의거와 이란성 쌍둥이처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조작하고 왜곡을 일삼은 세력들이 큰소리치며 오히려 진정한 항쟁관련자들을 옥박지르는 것은 3·15의거나 10·18항쟁 정신을 위배하는 불순한 의도를 넘어 범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속셈과 다르지 않다. 이들이 1989년 10주년 자료집 증언과 증언집 마산

편에서 10·18항쟁을 부정하면서 농단한 것에 대하여 창원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항쟁농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야말로 3·15의거나 10·18항쟁 정신을 진정으로 되살리는 척도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보』. 10(1), 1-21
- 김선미. 2016. “1970년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 연구: 1978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39』. 343~37
-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한국민족문화』. (67), 363-396.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남부희. 1995. 3·15의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굴절과 왜곡에서 자주적 민족운동의 좌표까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 153-161.
- 남종석 외. 2019. “부마민주항쟁에 있어서 부산지역 경제 배경.” 『사회사상과 문화』. 22권 1호, pp. 173-202.
- 마산경찰서. 「내부수사보고」. 1979/10/29.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부산/마산.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11.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마산: 불휘.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화운동사』. 부산: 부산광역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03.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부산: 민주공원.
- 박영주. 1985.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마산문화」. 제4호.
- 박영주. 1989.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 배규성. 2011.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제14집 1호,
- 송성안. 2018. “근대 마산지역 학생의 항일운동 경험과 3.15의거.” 『인문사회 21』. 제7권 3호.
- 손은하. 공윤경. 2010.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 419-446.
- 서익진. 2018.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인문논총』. 제46집.

- 서중석 외. 2017.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유신의 붕괴』. 서울: 오월의 봄.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부마에서 광주까지』. 광주: 샘물.
 유명철. 2018.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사회과교육』. 57(1), 37-71.
 조갑제. 1987a. 『유고1』. 서울: 한길사.
 조갑제. 1987b. 『유고2』. 서울: 한길사.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선거사』. 제2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 『대한민국선거사』. 제3집.
 정승안. 2018. “부마민주항쟁시기의 한국경제와 지역사회의 여건.” 『사회사상과 문화』. 21(2). 189-225.
 정유경. 2011. “부산지역의 부마항쟁에 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39), 291-326.
 정주신. 2017a. “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2호.
 정주신. 2017b.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 대전: 프리마북스.
 정주신. 2018. “10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 10·16 부산항쟁과 10·18 마산항쟁의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2권 1호. 5-44.
 편집부 편. 1984. 『칠십년대 한국일지』. 서울: 청사.
 편집실 편. 1984. 『사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서울: 학민사.

투고일 : 2019년 8월 15일 · 심사일 : 2019년 9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7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를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 체제 집권당』, 『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Masan's Democratic Movement : The 3·15 Uprising in 1960 and the 10·18 Buma Uprising in 1979.

Chung, Joo-Sh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ing about 10·26 accident by providing a fuse for the overthrow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0·18 Buma uprising. So, first of all, this article has a main purpose in analyzing the comparison between Masan's 3·15 uprising and 10·18 Buma upri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3·15 democratic movement in Masan with the 10·18 Buma uprising, given that the inciden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ictator to be overthrown in the event of an anti-dictatorial movement in Masan. The research method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e used as a research method in the 3·15 and 10·18 protests, given that if a person in power conducts election fraud or suppresses anti-government movements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it could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ose in power. In the end, the Masan 3·15 uprising and 10·18 uprising failed to reach a direct attempt to overthrow the regime due to unfinished democratic movements, but with the revolution of 4·19 and the massiv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10·26 Accident, he achieved the leading role theory that allowed the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In eradicating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 eventually brought about the collapse of the regime by making a hard-line stance on election schemes or popular protests over the trap of power boomerang, which causes the regime to collapse.

Keywords : Masan, Democratic Movement, 3·15 Uprising, 10·18 Uprising, 4·19 Revolution, 10·26 Accident